

이슈브리프 894호
(2026. 9.15)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상호 신뢰와 이행 추동 계기 될까

제894호

박정후 tamarix@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9월 16일, 수교 이래 최초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와 러·우 전쟁,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가 핵심 광물 공급과 유라시아 연결성 확대를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열리게 된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상호 관계 증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과 안보 및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으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를 통해 역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역외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5+1 플랫폼의 정상회의 또한 외부의 투자와 지원을 확보하는 통로이자 주요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균형외교와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고려해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유라시아 물류 인프라,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노후 전력망 교체, 디지털·정보기술(IT)·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인적 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여지가 높다.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과 투자,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합의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상 및 부처 간 합의 사항을 연도별 이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할 전담조직을 한국과 중앙아시아에 각각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담조직을 통해 부처 및 기관 간 경쟁과 중복 사업을 조율하고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상호 신뢰 축적은 물론,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제안보, 전략적 자율성, C5+1, 전담조직

2026년 9월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양자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2007년 출범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역외 1개 국가가 참가하는 ‘C5+1’ 포맷의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안보 시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2013년 9월, 중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한 축인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처음 제안했다.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유라시아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 경쟁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관세 장벽, 대규모 산업 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국가안보에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안보’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기존 러시아와 중동 중심의 에너지 공급 및 물류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중앙아시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한국과 C5+1 형태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협력

최근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C5+1 정상회의를 통해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 9월 첫 C5+1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2025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C5+1 딜 존(Deal Zone)’ 행사에서 250억 달러 이상의 상업 거래를 발표했다. 이듬해인 2026년 2월에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민관 비즈니스 포럼인 B5+1을 열어 무역·투자 장벽 완화와 규제 개선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회의 합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역·에너지 안보, 산업, 교통·물류 인프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중국·중앙아시아 정신(China-Central Asia Spirit)’을 제시하고 ‘항구적 선린우호협력조약(Treaty on Eternal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체결했다. 상호 존중과 지원, 호혜적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진출에 대한 중앙아시아 내 우려와 반증감정을 완화하려는 세심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2001년 중국 및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¹⁾를 창설했고, 2002년 출범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²⁾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2015년 출범한

1) 유라시아 정치, 경제, 안보, 에너지, 교통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현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이 정회원국.

2) 유라시아 일부 국가들이 구성한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집단 방위 원칙 표명.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정회원국.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³⁾을 통해서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단일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등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2022년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에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병력 파견을 주도해 주요 시설 보호 등을 지원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수용하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2022년 제1차 정상회의에 이어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2025-2027년 공동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안보, 경제, 물류, 에너지,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들로,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들 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각각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주요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는 차이가 있지만, 협력 의제는 대체로 안보,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유라시아 물류망 확충 등이 핵심이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국의 협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으로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균형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3) 회원국 간 상품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관세를 지향하는 경제 통합체.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정회원국.

역내 정체성과 결속도 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22년 반정부 시위 당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등 러시아를 자국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보루로 활용하면서도 자국의 러시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징집 움직임에 적극 반발하였다. 아울러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외교적 선택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역내 인프라 구축 및 경제개발 사업을 공동 모색하는 등 서방은 물론 중동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중앙아시아 우선(Central Asia First)’ 기조가 확산되면서 역내 협력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8년 시작된 중앙아시아 정상협의회(Consultative Meeting of Central Asian head of states)⁴⁾는 역내 국경과 수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2025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정상협의회 정회원 가입을 결정하였다. 나아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협의회를 ‘중앙아시아 공동체(Community of Central Asia)’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을 제안하는 등 역내 협력과 통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C5+1 정상회의 역시 역내 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외 중요 이슈와 주요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도 당분간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물류와 에너지 공급의 대안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 이후에도 이러한 입지를 공고화하기

4)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정례 개최되는 정상회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아제르바이잔(2025년) 등이 정회원국.

위해 현재의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보 분야의 대러 의존과 경제 분야의 대중 의존을 낮추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앙아 협력 방향

한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외교적 지향을 고려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금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의제 또한 앞서 주요국이 C5+1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확충, 유라시아 물류망 확대 및 건설 참여,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노후 전력망 교체 등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디지털·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과제들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 투자 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중앙아시아 역시 한국에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크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와 같이, 혁신과 번영, 연결성 증진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 상호 신뢰는 상호 실천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협력 과제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때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모멘텀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와 부처 간 협의에서 도출한 합의에 대해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중앙아시아 관련 사업은 외교·산업·재정 담당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민관 협력체 등 여러 층위의 다양한 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측에 각각 범부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복, 또는 정돈이 필요한 사업들을 조율하며 협력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